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41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4. 17. ~ 2024. 04. 30.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방효배	58.0.15.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4길 OO
2	김영태	60.0.12.	채권(예금)	₩47,79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OO
3	주낙연	62.0.10.	채권(예금)	₩22,302,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OO
4	김영환	62.0.04.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광명시 광이로12번길 OO
5	김수복	62.0.12.	채권(예금)	₩31,860,0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OO
6	박종수	63.0.03.	채권(예금)	₩13,275,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OO
7	조금희	63.0.10.	채권(예금)	₩22,302,00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36 번길 OO
8	김덕용	64.0.27.	채권(예금)	₩31,860,000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OO
9	유흥석	65.0.10.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1길 OO
10	장명철	67.0.10.	채권(예금)	₩3,78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26번길 OO
11	김성훈	69.0.15.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03번길 OO
12	지상현	70.0.22.	채권(예금)	₩22,302,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OO
13	오경석	72.0.04.	채권(예금)	₩20,072,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0번길 OO
14	이동주	75.0.23.	채권(예금)	₩5,572,5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OO
15	박종환	82.0.31.	채권(예금)	₩18,0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옥수길 OO
16	안호현	75.0.11.	채권(예금)	₩7,5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OO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